

순자산 5000억인데 250억 채무... '깡통 역외지주' 주의보

역외지주사 36곳 중 14곳 상폐
공시 미흡... 재무 확인 어려워
자체 지급능력 등 유의해야

국내 증시에서 외국기업인 A사가 250억원의 사채를 갚지 못해 상장폐지됐다. 분명 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자기 자본이 5000억원 이상이었는데 말이다.

문제는 A사가 본국의 사업재무회사의 실적만 우량할 뿐 자체 상환능력은 전혀 없는 '빈 깡통' 역외지주사였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현 제도 상 문제점 등을 검토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이나 일본 등 본국에서 고 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주식 또는 예탁증서를 국내에 직접 상장한다. 반면 본국 상장이 어려운 중·소 규모의 기업들은 해외에 설립한 역외지주사(SPC)의 주식을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총 36개사다. 이 가운데 25개사는 역외지주사 주식을, 11개사는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를 상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바로 역외지주사다. 지금까지 상장폐지된 외국기업 14개사 중 12개사가 중국기업의 역외지주사였다.

역외지주사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본국 사업재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고 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역외지주사의 자체 수익구조나 유동 자산 현황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본국 사업재회사의 우량실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착시로 A사처럼 역

외지주사의 재무상황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8월 국내 상장 외국기업과 관련된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조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함에도 사채 미상환이 발생한 사유 등을 논의했다"며 "그 결과 해당 기업은 역외지주사로서 본국 소재 사업재회사들과의 연결재무제표 상으로는 건전한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자체 상환능력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본국 사업재회사와의 외환거래 관련 위험 공시도 미흡한 실정이다.

역외지주사는 국내 증시에서 조달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대금 대부분을 본국 사업재회사 지분 출자나 금전 대여 형식으로 본국에 송금한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외화 송금 절차 이행 여부나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인한 자금 미회수 위험 등의 공시는 잘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 지분을 인수할 경우에는 회사사 자본금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외환관리 당국의 비준을 받아야 지주사가 나중에 배당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자회사 대역시에는 외환관리 당국에 이 내용과 관련한 외채등기를 해야 지주사가 원금이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와 본국 사업재회사간 정보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판단시 역외지주사의 자체 지급능력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향후 관련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외환보유액 또 '사상 최대'... 4265억달러

10월 말 기준 전월비 59.6억달러↑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 등 영향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65억1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59억6000만 달러가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비롯해 금융기관의 기준 예치금 증가,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이 3836억6000만 달러로 90.0%를 차지했으며 ▲예치금 305억1000만 달러(7.2%) ▲금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다. /뉴스시

47억9000만 달러(1.1%) ▲IMF포지션 43억6000만 달러(1.0%) ▲SDR 31억9000만 달러(0.7%)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회계이슈 사전예고제 안착... 수정비율 ↑

4년간 5곳 중 1곳 오류사항 수정

사전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해 당해 연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에서 올해 5월까지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총 549건의 오류 수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120건(21.9%)이 테마심사 대상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직접 관련한 오류사항을 수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테마심사·감리 대상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했다. 사전예고한 회계이슈 취약분야에 대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한층 집중 점검한다. 2018년 3월까지의 당해 연도 반영 비율이 32%에 불과했지만 이후부

터는 49.5%까지 상승하는 등 당해 연도 수정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테마심사·감리 지적사항은 고의적인 위반보다는 과실·중과실에 의한 위반이 95.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4년 이후 테마심사·감리 결과 중 결처리된 143개사 중 회계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48개사(33.6%)다. 고의성 있는 회계위반보다는 위반동기가 과실(26사, 54.2%) 및 중과실(20사, 41.6%)로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고의가 아닌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수정권고를 거쳐 경조처로 종결된다"며 "상장회사 등은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 오류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자진수정·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전경련 "美 대선 다음해 對美 수출 '적신호'... 철강 타격"

수출액 성장률 4.2% 감소 전망
韓 대한 직접투자도 위축 경향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시작되면서 개표 결과에 대해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대선 선거 개표 결과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과에 따른 한국 경제의 영향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 대선에선 다음해 한국의 대미 수출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대선이 치러진 해보다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30년간(1988~2018년) 대미 수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선 다음해(8개년도) 대미 수출액 전년 대비 성장률 평균은 4.2% 감소했다.

반면 나머지 22개년도의 수출액 성장

률 평균은 8.2% 증가로 대조를 이뤘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2000년 이후 5차례 사례 중 4차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에서는 1975년 터프트와 노드하우스가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경기순환에 주목했다. 이들에 따르면 통상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현직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재선을 위해 팽창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사용해 경기를 부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선 다음해에는 과열된 경기가 조정·수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8년 이후 미국에서는 총 8차례의 대선이 치러졌는데 이 중 1996년 대선, 2016년 대선 2차례를 제외하고, 6차례는 대선 다음해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대선 이전 해에 비해 감소했다.

1988~2018년 총 8회의 미 대선 직후 다음해 중 5회 역성장했다.

주요 산업별로 수출 실적을 보면 변화 폭이 가장 큰 산업은 철강이었다. 철강 산업은 미 대선 다음해에는 평균 8.1% 감소율을 기록했으나 나머지 해에는 20.7% 성장률을 기록해 차이가 28.8%p에 이르렀다. 철강은 경기민감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가 가장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풀이된다.

자동차 산업 역시 미 대선 다음해에는 평균 6.9% 감소율을 보였으나 나머지 해에는 13.8% 상승으로 차이가 20.7%p에 달했다. 반도체는 각각 -0.7%, +11.5%로 12.2%p의 격차를 보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역시 미 대선 다음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2000~2019년 성장률 평균은 29.8%인데 반해 미 대선 다음해 성장률은 5차례 사례 중 4차례에서 전년 대비 투자가 줄었다.

/양성운 기자 ysw@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업 감시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의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기획감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는 부실기업의 조기퇴출 등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상장적격성을 심사해 기업의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 대상 기업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말 기준 실질심사 사유 발생 기업은 54곳으로 전년 동기(36곳)보다 약 50%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심사 대상기업의 경우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등 부정거래 가능성이 크다"며 "상장폐지사유 발생에 따른 매매정지 전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유인이 높아 면밀한 시장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54곳의 매매양태를 살펴볼 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무소 전경.

획이다. 특히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현재 실질심사 대상 기업의 매매 데이터와 공시자료 등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대주주와 임원 등의 지분공시 등 공시자료를 분석해 내부자 추정 계좌 등을 확인한 후 해당 계좌의 매매양태를 심층적으로 모니터링 예정이다. 만일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곧바로 감독기관에 통보된다.

/송태화 기자 avin@